

시론

우리나라 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신준우

광주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

이번 새로운 정부의 공약 중 하나로 우리나라도 '회계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새 정부가 제정하려는 '회계기본법'은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 등 다양한 조직의 회계에 대해 보편적이고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회계기본법'은 기업회계와 비영리회계 등을 총괄하는 법으로 회계기준, 외부감사, 공시, 감독까지 전 과정을 명문화해 회계 투명성(Accounting Transparency)과 회계정보의 신뢰성(Reliability)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학교법인, 병원, 지방자치단체, 협동조합, 비영리재단 등 비영리조직과 소규모 기업이 공공기관, 공익법인 등은 소관 법률과 주무 부처가 달라 일관되고 체계적인 회계 정제가 필요한 영역이다.

영리법인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나 일반기업회계기준 등을 적용받고 있고, 공익법인은 「상속세및증세법」에 따라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기관재무회계규칙을 적용받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을 적용받고 있고, 공기업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회계사무규칙을 적용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자는 근거 법령이 없어 지방자치단체 관리지침을 적용받고 있다.

이처럼 비슷한 경제적 실체임에도 적용받는 회계기준이 다를 경우 회계정보의 일관성(Consistency)과 비교 가능성(Comparability)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지금까지 국내 회계학계와 공인회계사회 등 회계실무 영역에서는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회계사각각대 최소화 등을 위해 '회계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따라서 '회계기본법'은 회계기준, 외부감사, 공시, 감독 등 회계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법률로 회계영역에 산재 돼 있는 개별 법률을 모아 정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즉 용어,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 외부감사, 감독 및 제재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을 하나의 법률로 정하고, 조직별 특성에 맞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 회계 선진국들은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외부감사, 공시, 감독 관련 규정의 법률을 통해서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위스, 스웨덴, 벨기에, 중국, 대만 등은 별도의 '재무회계법'을 제정해 영업 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형태의 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미국, 영국, 일본은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에 각각 상이한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일정 규모 이상 조직에 대한 외부감

사 및 공시제도를 의무화하고 있고 법 기반 위에서 감사 기준이 운영되며 독립적인 기관을 통해 회계 제도를 감독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회계기본법'을 통해 비영리조직을 포함한 회계정보의 공통 원칙을 마련하고, 정보 공개 및 감독 체계를 보다 일관성 있게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도 '회계기본법'이 제정된다면 국가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일관된 회계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는 회계기준의 일원화는 물론, 비영리 조직의 회계 투명성과 책임심도 또한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이미 '국세기본법'이 제정돼 있어 세무영역에 있어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를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제는 세무영역뿐 아니라, 회계영역에서도 '회계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돼 산재돼 있던 회계 관련 기준을 국가 차원에서 통일하고 기본적인 공통적인 사항을 명시해 우리나라의 회계 선진화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해 본다.

社說

도심 노후 공동주택 대대적 정비 주거복지 확대해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광주에서 준공 30년을 초과한 공동주택 비중은 24%로 10만7천691세대에 이른다. 2022년 16%(6만6천977세대)에서 최근 3년 사이 8%p 상승했다. 자치구별론 북구 32%, 남구 29%, 서구 22%, 동구 19%, 광산구 16% 순이었다. 전남은 27%(10만1천323세대)에 달했다. 2022년 17%(5만9천49세대)에서 10%p 뛰었다. 전국적으로는 22%로 3년 전과 비교해 10%p 증가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광주와 전남이 높은 편이다. 앞으로도 노후주택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게 부동산R114의 예측이다.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속적인 인구 유출, 지역경제 축소 등에 따른 도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단적으로 광주의 경우 140만명이 붐볐다. 21년 만의 일이다. 특히 최근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20-30대 청년층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주요 원인으로 첨단 산업업 분야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꼽히지만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따른 불안정한 집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기본적인 생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 추구를 위해 대대적인 정비의 필요

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행히 새 정부도 구도심 주거여건 향상과 공급 확대 기조를 내비치고 있어 관련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수도권 블랙홀 현상 속에 아파트 신규 분양 역시 집중되고 있다. 물론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살만한 주택 제공에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도 재개발-재건축 진입 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 기대를 키운다.

광주·전남 공동주택 4곳 중 1곳이 건축된지 30년을 넘었다. 개발 여건이 취약한 지방의 경우 지역경제 규모와 인구 구성을 파악한 뒤 사업성 보안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맞춤형 공급을 늘려야 한다. 고품질 주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 현저하게 낮은 비율의 공공주택을 충분히 제공하는 조치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누구든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집에서 살 권리가 있다.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

전남도 강부지사 정부·경제 가교역할 시험대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가 취임 인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 1년 이내에 오랜 숙제들을 해결하고 싶다고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을 거론했다. 대신 후보 시절에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 이대통령이 자신 스타일대로 TF를 꾸려 속전속결 추진할 것이라며 새 정부의 성공과 함께 호남도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남도는 정책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업무 추진력과 소통 능력이 뛰어나며, 일선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선임 이유를 설명했다. 폭넓은 인맥과 네트워크를 잘 살려 새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인공지능(AI), 에너지 고속도로, 통합대학교 국립과대학 설립 등 도정 현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강 부지사가 '친명' 인사로 분류되는 점에서 내년 지방선거 3선 도전은 공식화한 김연록 지사가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경제부지사는 핵심 정부직으로, 일자리 창출과 전략산업 육성, 국비 확보 등 경제 전반을 아우르며 정치권과의 소통 창구 기능도 수행하는 자리다. 전남도는 민선 8기 마감까지

1년인 상황에서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을 인선하기 어려운 사정을 들어 별정직 1급을 임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해서 강 부지사는 대통령인 총리든 당이든 핫라인으로 연결해 행정 안에 들어와 뭔가 할 수 있는 호남 정치 자산이 많지 않다고 가고 역할에 방점을 찍었다. 물론 고향인 영광에서 복지공동체 '여민동락'을 10여년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이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농식품유통위원장으로 일하며 전국 최초 기본소득을 시범 실시하는 등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강 부지사는 지역발전 위한 도구로 써 달라고 한다.

21대 대선 승리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 그룹과 외부 전문가, 성남·경기 라인까지 다양한 인맥의 지원이 원동력이 됐다. 강 부지사는 호남특보단장으로 당 외곽에서 힘을 보탤다. 그리고 전남도 경제부지사에 임명됐다. 경제정책, 실무 경험 등 전문성 부족 등의 우려가 있는 가운데 도민들의 관심이 많다. 전남의 대표 현안이 국정과제에 채택되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했다. 마땅히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강 부지사의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의료칼럼

심혈관질환을 유발하는 '고지혈증'



곽희호

목포청연방병원장

병 자체보다는 합병증으로 증상이 나타난다. 고지혈증은 혈액검사로 진단한다. 9-12시간 정도 금식 후 채혈해 아래의 4가지 중 하나라도 이상이 있다면 고지혈증으로 본다.

총 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이 200mg/dL 이상, LDL 콜레스테롤이 130mg/dL 이상, HDL 콜레스테롤이 40mg/dL 이하, 중성지방이 200mg/dL 이상인 경우다.

추가로, 중성지방(Triglyceride)이 400mg/dL을 넘는 경우에는 직접 LDL 콜레스테롤을 측정해야 한다.

혈액 내의 콜레스테롤에는 LDL 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이 있다. HDL 콜레스테롤은 고밀도 지단백질로, 혈액을 순환하며 말초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건어내 간으로 이동시켜 심혈관질환을 예방해준다.

흔히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것이다. 반면 LDL 콜레스테롤은 저밀도 지단백질로, 콜레스테롤의 일부를 말초혈관 내벽에 이동시켜 준다.

LDL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높을 경우 말초혈관 내벽이 두꺼워지고 혈액순환이 악화되어 심혈관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어 LDL 콜레스테롤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린다.

고지혈증의 치료 목표는 혈관질환의 예방 및 진행 억제이다. 생활습관 교정은 필수이며 약물치료, 한약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효

과적이다. 생활습관 교정에서는 식이요법이 가장 중요하다. 섭취하는 지방량을 일일 섭취 칼로리의 25%로 제한해야하고, 과다한 탄수화물 섭취 또한 중성지방을 증가시키므로 적절하게 먹는 것이 필요하다. 식이요법과 함께 운동요법도 병행해야 한다. 하루에 30분 이상씩 주 4-6회 운동을 실시하며 걷기, 자전거운동, 수영 등의 가벼운 유산소운동을 권한다.

약물치료는 주로 스타틴(statin)을 활용한다. 스타틴은 HMG-CoA 환원효소 억제제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해 LDL 콜레스테롤을 집중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스타틴과 자주 병용되는 약물은 에제티미브(ezetimibe)가 있다.

한약치료 또한 고지혈증에 유효하며, 양약과 병용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의학에서 고지혈증은 혈중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혈액 내에 노폐물이 쌓인 어혈(瘀血)로 변증해 치료한다. 한약재로는 구기자가 중성지방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다음하는 처방으로는 대시호탕(大柴胡湯)이 있다.

성인병의 유병률이 계속 높아지며 질병 자체에 너무 익숙해져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병은 병이기에, 질병으로 인한 합병증의 위험을 파악해 일상생활에서 미리 관리해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기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기대한다



조승환

누구나 동행 아카데미 사무총장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시장과 도시사 재임 시절에 소상공인과 서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해 왔다.

특히 청년 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 무상교육 제공, 지역화폐 발행 등 이재명표 복지정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지역 주민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켰다. 이러한 복지정책들은 전국적으로 확산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정책을 도입하는 계기는 물론 공정한 사회를 향한 초석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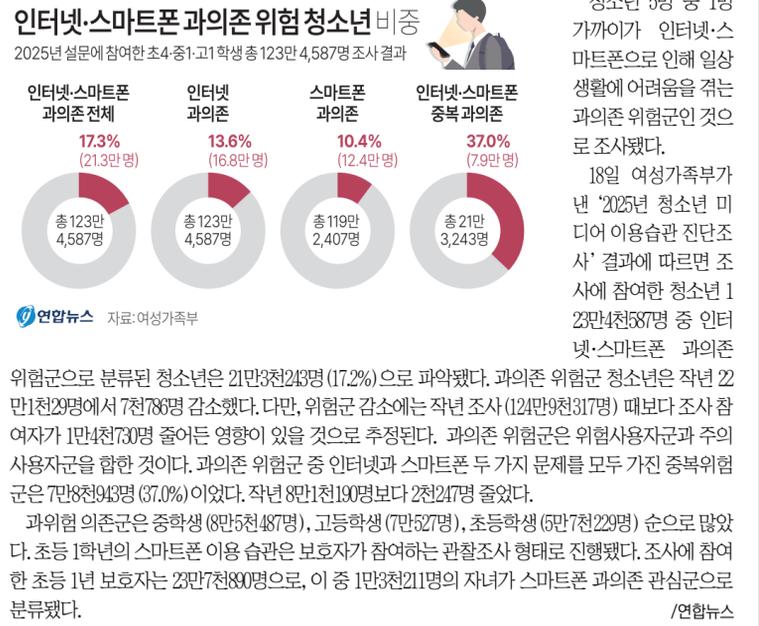
광주는 문화와 역사가 풍부한 도시이자,

교육과 과학 기술의 중심지로도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발맞춰 이 대통령은 과학 기술의 발전과 인재 양성을 중요한 국정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는 서구의 교육 인프라 및 연구기관과 같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AI와 같은 첨단 산업 육성은 광주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누구나 동행 아카데미'는 이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광주 공동체와 함께 더욱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소상공인의 이익 실현과 자치분권 강화,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는 우리가 공동으로 이뤄야 할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래픽 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 설 실 650-2006	편집지원부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사업 본 부 650-2007	입부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 두 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제)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0원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